

中企·소상공인 규제 79건 개선… ‘현장애로’ 해소 나선다

중기부·中企 옴부즈만 합동 추진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보고·확정
창업·신산업 21건 등 불편 완화
고질규제 28건·숨은규제 30건 정비
韓 “제감 애로 상당부분 해소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79건을 적극 개선한다. 여기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면제범위 현실화(기후부) ▲공장 부대시설로 전기·통신·소방공사사업 사무실 허용(산업부) ▲전자어음 이용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법무부) ▲조달 사전심사 부적격자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조달청)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형태 유연화(식약처) 등 범부처 규제가 골고루 포함됐다.

중기부와 중기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오전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방안(관계기관합동)’을 확정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뉴시스

고 밝혔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상식에 부합한 규제 ▲규제목적은 준수하되 비용이 낮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창

업·신산업 규제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를 선정, 개선기로 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면제범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근로자

5000명당 1명 선임해야 한다. 반면 ‘판매업’은 500명당 1명을 선임하고 유해화학물질 보관계획서 제출 및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이동시에는 판매업 허가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업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실내 설치 스피커 제조업체 T사는 제품 설치를 위해 실내 배선작업 등의 전기공사가 필요해 전기공사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입주에 애로를 먹고 있었다. 그동안 공장 부대시설에 전기·통신·소방공사사업 사무실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장 목소리로 인해 전문 건설업 사무실과 같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는 전기·통신·소방공사사업 사무실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어음 수수료가 발행기업

(1000→1500원)보다 수취기업 부담이 높아 수취인 결제수수료(2500→2000원)도 낮추는 동시에 향후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시 탈락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신청이 가능한 최소기간을 현행 ‘90일 이후’에서 ‘60일’로 단축했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시 활용성이 낮은 CD, 디스켓 등으로 전자적 기록매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애로 목소리도 높아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선 소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 활성화

‘제3자 부당개입 해결 TF’ 2차 회의
신고자 면책제 도입, 포상제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1월 중 도입·시행한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중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노용석 중소기업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 참석했다.

회의에선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했다. 또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최종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우선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

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이달 중 도입한다.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니라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대출·보증 제한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게 골자다.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취한다.

또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 유인한다. 신고인에게는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중기부 소속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4개 기관 외에 기정원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과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꾸리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3곳 신규 모집

소진공, 선정대학 최대 2.5억 지원
로컬창업 현장훈련 공간 거점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에 새로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 15일 소진공에 따르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은 로컬콘텐츠 개발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현장 경험을 갖춘 잠재력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점수와 평가를 거쳐 3개 대학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로컬창업 현장훈련 공간으로 거점화해 차별화된 로컬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로컬 창업 관련학과 또는 융·복합학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 ‘교과 과정’ ▲

로컬창업 실습, 시제품 개발, 현장실습, 창업 동아리 운영 등 ‘비교과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지역가치 창업 전문학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을 포함한 전공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한 대학으로, 소진공은 선정 대학이 제출한 서류와 사업계획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규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학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2억5000원까지 지원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경영, 사회·문화, 디자인 등 자신의 전공과 로컬 창업 관련 부전공 등을 융합해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설 맞이 ‘모바일 10% 할인’

적립금 이벤트·신규 웰컴쿠폰 지급

공영홈쇼핑이 설을 맞아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펼친다.

15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월11일까지 ‘할인이 왔단 말이야’ 행사를 진행한다. 명절 상품을 모바일로 주문하면 10%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상품은 공영홈쇼핑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과, 배, 굴비 등 제수용 먹거리는 물론 명절 선물용 상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16일부터 2월11일까지 ‘적립이 왔단 말이야’ 이벤트를 통해 적립금도 받을 수 있다. 방송 상품을 대상으로 2회 이상, 누적 주문 금액 20만원 이상 달성 고객에게는 적립금 7000원을 지급한다. 2회 이상, 30만원 이상 달성 시 1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3월10일



공영홈쇼핑 설특집 이벤트.

지급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30일이다.

1월 한 달간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반갑단 말이야’ 이벤트도 펼친다. 공영홈쇼핑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최근 3달간 구매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웰컴 1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김승호 기자

中企업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

중기중앙회-기후부

‘기후·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재생에너지 지원확대·규제개선 건의

중소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크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후부와 제40차 중

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중기중앙회 오기용 상근부회장과 기후부 금한승 제1차관을 포함해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장용환 이사장은 “최근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계시별 요금이 산업 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기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기후부는 “한전의 재무 상태, 기업의 전력 실질 수요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유영진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4·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후부는 “IoT 부착효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중별 현장 상황·운영성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 및 수준 등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